

# 제한 중국 동포의 정체성의 정치: 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이춘호\*\*

### | 목 차 |

I. 들어가며	선족의 유입
II. '정체성의 정치' 개념과 전략	2. 제한 중국 동포 단체의 조직과 변화
1. 정체성의 정치: 소통과 인정의 과정	IV.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의 정치' 양상
2. 이주자의 '정체성의 정치' 전략	1. 정체성의 재구성
들: 동화 전략과 차이 전략	2. 정체성의 정치 전략
III. 제한 중국 동포 단체의 형성과 발전	V. 결론
1. 한국의 이주자 정책과 중국 조	

### | 논문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제한 중국 동포의 정체성의 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가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상호 인정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제한 중국 동포가 조직한 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 적응 방식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제한 중국 동포는 제도와 문화의 수용자적 입장에서 요구자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스스로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싹트고 있었다. 또한 이주로 인해 변화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점차 자신들의 '차이'를 드러냄과 더불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요구하는 주체화를 이루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은 일방적 동화보다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주체가

\* 이 논문은 이춘호의 박사학위논문 중 관련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BK21+ 글로벌 디아스포라 창의인재양성사업팀 신진연구인력.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제한 중국 동포, 이주자 단체, 정체성, 주체화, 정체성의 정치

## I. 들어가며

이주란 가시적인 지리적 이동을 의미한다. 현대 국가체제에서 지리적 이동은 국경을 넘는 행위이다. 또한 국경을 넘음으로써 국민국가 단위로 나누어진 민족적·문화적·사회적 이질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로써 이주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언어, 음식, 관습과 같은 생활양식의 동질성과 사회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등 자신을 구성해 왔던 모든 요소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사회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이주자에게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오며, 이러한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에 따라서 이주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게 된다. 소이살(Soyсал 1994)은 이러한 이주자의 정체성 변화와 관련하여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은 그들이 자국에서 가져오는 불변적 특징의 결과라기보다는 거주국 국가의 통합체제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정치적 구성물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자의 정체성은 거주국의 이주자 정책과 거주국의 인식 등 다양한 요인들과 결합하여 변화한다.

한국은 이주자 유입의 양적 증가와 함께 다양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이주자에 대한 태도는 임도경(2010)과 여성가족부(2012)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질적인 것에 대한 편견과 배타성이 강해 다문화주의적 가치관을 배양하기에는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이주자 정책은 이주자들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적응을 강조하는 동화주의적 측면이 강하며, 이주자를 인정과 소통의 대상보다는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자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자국민들끼리 모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이주

자 공동체를 형성한다. 공동체를 통해 이주자들은 같은 언어권의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에 의지함으로써, 배타적인 사회에서의 상실감을 보상받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사회의 이주자 공동체들은 대부분 국가적·민족적 정서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있다(김홍진 2007, 196). 그러나 이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주자 공동체의 성격은 변화를 보인다. 체류의 연장 등을 통해 장기 정착을 이룰 경우 이주자들은 거주국 사회에 대한 지향이 증가하며, 가족 재결합을 비롯한 거주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에 따라 공동체도 초기 출신지별 모임에서 점차 거주국민과 상호 교류하며, 영구 정착을 위한 활동으로 변화하게 된다(석현호 외 2003, 374).

한국의 이주자 공동체의 형성·발전 과정에서도 각 단계별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안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에 관한 국경없는마을 다문화사회교육원(2007)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이주노동자의 공동체는 국적별로 쉽게 나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 내부의 분화와 외부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을 통해 점차 변화한다고 한다. 더불어 이주자들의 환경 변화에 따른 정체성 변화와 적응 방법에 따라 초기 민족적 공동체에서 위계적, 성적, 문화적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전된다.

그러나 재한 중국 동포<sup>1)</sup>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주자로서 국적은 다르지만 한민족이라는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실상 이주노동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방문취업제 등 보다 유연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한국으로의 이주 이후 이주 노동자라는 하향적 재위치화, 같은 동포지만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한국인들의 이방인을 바라보는 배타적 시선 등을 경험하고 있다.

1) 중국 조선족의 호칭과 관련해서는 중국 동포, 재한 동포, 재중 동포, 조선족 등 다양한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 '조선족'이라는 말은 사실 중국 정부가 56개 민족 중 연변지역의 한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분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서 한국 내 중국 조선족에게 동일하게 용어를 사용할 때 이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연변 조선족(한중수교 이후 유입된 한국인과는 구별)은 '중국 조선족'이라고 칭하며,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경우에는 '재한 중국 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재한 중국 동포'라는 용어는 2007년 실시된 방문취업제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0년 국립국어원에서 조선족이라는 말 대신 중국 동포, 재중 동포를 사용도록 권장한 바가 있는 만큼 보다 적절하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한 중국 동포는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 속에서의 문화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재생산해내고 있다.

현재 재한 중국 동포는 구로구, 영등포구, 가리봉동 등 집중 거주지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생활권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단체를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0년 조직된 '조선족연합회'는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에 참여하여 2004년 개정 재외동포법을 이끌어 냈으며, 자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단체 활동이 최근에는 '재한조선족유권자연맹'의 결성을 통한 정치 참여 운동(『월드코리아』 2012/11/13), 지역사회와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봉사단체의 설립, 중국 동포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단체 간 연합체의 구성(『동북아신문』 2013/12/11) 등 그 영역과 운동의 목적이 점차 다양화·다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사례와 같이 재한 중국 동포들은 조직화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공론화하는 한편,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점차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재한 중국 동포의 조직화에 주목하여 재한 중국 동포 단체의 형성과 주요활동, 회원 구성, 단체 성격, 연대 등의 분석을 통해 재한 중국 동포의 한국 사회 적응 방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의 정체성 정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 사회가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상호 인정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 논문 및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한 중국 동포 단체 관련 현황을 고찰하고, 언론 보도와 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체의 조직과 구성, 활동 등을 분석해 볼 것이다. 또한 재한 중국 동포 단체장과의 면담을 통해 문헌으로 드러나지 않는 단체 활동과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재한 중국 동포가 느끼는 위치성과 이들의 정체성 정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표 1> 면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참여자	체류기간 및 법적 지위	입국 목적	연령	성별	비고
A	7년, 국적 취득	취업	57	남	이주자 발간 신문사 임원
B	8년, 국적 취득	취업	48	남	이주자 공동체 임원
C	3년, H-2	취업	35	남	제조업체 근무 이주자 공동체 활동
D	6년, 국적 취득	결혼	32	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공동체 자조모임 임원
E	10년, F-4	취업	36	남	이주자 공동체 운영자
F	12년, 국적 취득	취업	45	남	이주자 공동체 조직 임원

## II. ‘정체성의 정치’ 개념과 전략

### 1. 정체성의 정치: 소통과 인정의 과정

정체성의 정치는 넓은 외연을 가진 개념으로서 시대와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변화하였다. 국민국가시대 정체성의 정치는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과정, 즉 동일화(identification)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세계화와 초국가주의의 대두는 국경을 초월한 활발한 인구의 이동을 야기했으며, 국가 내 다양한 인종과 민족에 대해 더 이상 획일적인 동일화를 어렵게 했다. 이에 따라 정체성의 정치는 그 주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일었으며, 다양한 방식과 통로를 통해 형성되는 다양한 주체들과 그들의 다중적 정체성을 포섭하기 위한 정체성의 정치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자아’의 개념도 과거에는 역사·정치·사회·문화·언어의 테두리에서 형성된 구성물로 인식하고 고정불변의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자아가 더 이상 어떤 본질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구성되는 존재로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고 재구성된다는 이른바 ‘관계적 자아’로 봐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구성주의 입장에서 정체성 이론을 확립한 에릭슨(Ericson 1968)은 자아정체성을 “고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자아정체성이란 동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에서 부딪히는 내적 충동과 욕구, 외부 자극, 그리고 도덕적 가치들을 수용하여 자기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을 재통합함으로써 형성된다고 주장했다(김경진 2012, 186 재인용).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정치철학 및 담론으로 끌어올린 데 기여한 것은 테일러(Taylor)이다. 테일러는 자신의 ‘인정(recognition)’을 둘러싼 정치 개념을 뒷받침하는 핵심으로 정체성을 말했다. 테일러는 정체성을 정의함에 있어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이자,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이고 명시적 특성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인정’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말한다. 사회가 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된 승인은 피해를 끼치거나 억압의 한 형태로 변할 수 있으며, 그것은 그 사람을 거둬두고 왜곡된 존재 속에 가두는 것이다. 따라서 정체성은 일단 왜곡되면 그것을 내면화한 개인은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계속적으로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듯 테일러가 ‘인정’을 둘러싼 정치를 정체성의 정의에서 시작하는 것은, 근대적인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의 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이 정체성을 통해서 보장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Taylor 1994, 25-26). 테일러는 이러한 정체성은 고립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의 대화적 관계를 통한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호네프(Honneth) 또한 정체성은 자신의 순수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항상 타자에 대하여 주장하고 타자들의 의해서 인정받는 관계성 속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내가 누구이며 누구일 수 있는지에 내용을 부여하는 것은 타자와 맺는 상호주관적 관계에 의존한다

고 말하며, 이러한 관계속의 인정을 통해 정체성은 획득된다고 한다(장미경 2005, 163 재인용).

그는 ‘인정투쟁’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개인들의 자기이해는 주체와 타인 간의 상호주관적 ‘인정’의 과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기술함에 있어 ‘개인은 자기 자신을 대상화함으로써만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sup>2)</sup>. 이렇게 형성된 의식이 인정받지 못할 때, 주체는 새로운 인정의 형식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된다. 이때 새로운 인정의 모색이란 자신의 권리와 정체성의 인정을 위해 타인이 규정하는 나에게 부여된 가치, 규범,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그것들을 규정하는 타인에게 합리적이고 사실성과 타당성에 근거를 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권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호네프트는 이처럼 권리인정을 위한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사회적 행위 양식을 ‘인정투쟁(struggle for recognition)’으로 정의하였다(호네프트 2011, 256-260). 특정 개인이나 집단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새로운 ‘우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이는 곧 행위자들 간의 문화적·정치적 정체성 개념을 명료히 하는 과정이자 지속적인 제협상과 투쟁의 과정이다.

이렇듯 근대 국민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작용했던 획일적 정체성의 정치가 현재는 다문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정 요구와 함께 차이와 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은 국가가 시민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통의 사회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이 형성되며, 개인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자기존중, 자기가치 부여, 자기민음의 정체

2) 미드가 말하는 ‘목적적 나’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상이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위조차도 항상 이미 지난 것을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주격 나’는 나의 모든 현재적 행위의 규정되지 않은 원천이며, 비록 인지될 수는 없지만, 행위상의 문제에 대한 창조적 반응을 책임지는 개성의 심급을 뜻한다. ‘주격 나’는 인간의 자발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주체가 자신의 상호작용 상대의 관점에서 갖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에 앞서 있을 뿐 아니라 ‘주격 나’는 항상 ‘목적적 나’ 속에 의식된 행위표현들을 사후에 새롭게 해석하는 관계를 갖는다. 미드는 지속적인 주체의 반작용 과정에서 형성된 ‘다수의 목적적 나’에 대한 지적을 통해 인간의 자기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이 형성된다. 반대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에 대한 인정 철회는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의 위험을 동반한다(호네프트 2011, 250-251). 또한 국가의 ‘정상시민’에 대한 집착은 이주자의 권리문제를 주변화하거나 배제시킬 수 있다.

프레이저(Fraser)가 ‘인정의 정치’를 비천하게 여겨진 개인과 집단의 손상된 정체성을 상향조정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와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체성의 정치’의 한 부분으로 해석했듯(킵리카 2008, 462), ‘인정투쟁’이란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과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성과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정체성의 정치와 연결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주자의 정체성 정치는 이주자가 거주국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한 ‘우리’라는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요구하는 이주자의 협상을 통한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과거 정체성의 정치가 국가에 의한 국민 ‘만들기’였으나, 현재는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통합으로서 주체에 의한 ‘되기’라는 적극적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체성 정치는 연대감과 공통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통제된 실현을 위한 상호작용, 상호인정, 커뮤니케이션, 상호 결속된 집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조직화가 이루어졌을 때 실현 가능할 것이다(Brubaker 2004, 12-17).

## 2. 이주자의 ‘정체성의 정치’ 전략들: 동화 전략과 차이 전략

일반적으로 정체성 정치에서 소수자의 전략과 관련하여 딘(Dean 1996)은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동화단계, 적응단계, 책임단계로 구분한다. 동화단계는 근대적 주체를 기준으로 주변적 주체가 중심주체로 동화되는 단계이며, 이러한 단계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소수자 운동의 전략이 구사된다. 적응단계는 주변적 주체가 중심적 주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동화되기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차이를 강조하는 전략을 펴는 단계이다. 마지막 책임단계에서 주체는 더 이상 고정된 정체성

에 기반하지 않고 구조와 관계의 산물임을 인식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자아는 타자들과 다중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한다. 이때의 행위 전략으로서 주체는 상호인정과 책임을 통해, 자율성과 연대를 강화시켜 나간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프레이저 역시 ‘긍정 전략’과 ‘변형 전략’을 제시했다(장미경 2005, 164-165 재인용). 그는 ‘재분배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를 ‘동등 참여’라는 정의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수 있다고 보며, 동등한 참여를 위해서는 각각의 참여자가 독립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물리적 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동시에 문화적 차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등한 참여를 막거나 차별하는 제도화된 문화적 가치가 존재할 때, 이에 대한 대항으로 긍정 전략과 변형 전략의 추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때 긍정 전략은 집단적·문화적 특질 즉 정체성을 인정받아 주류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된다면, 변형 전략은 집단 문화 정체성을 규정하는 제현의 언어 자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문화 자체가 그 내부에 헤게모니 투쟁과 갈등을 안고 있는 모순되면서도 역동적인 복합체로 상정되기 때문이다(김영옥 2010, 40).

위의 학자들의 견해에서 나타나듯이 정체성의 정치는 주체의 운동방식과 발전단계에 따라 크게 동화 전략과 차이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동화 전략은 정체성 정치에서 비교적 초기에 나타나는 전략이다. 이 전략에서 소수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지배적 다수자와 동화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20세기 초 여성운동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동화되려 했던 것과 흑인 운동이 자신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백인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것 등과 같은 전략이다(고동현 1999, 120). 이러한 동화 전략은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는 대신에 특수한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 그들의 가치를 철회하도록 하는 더 큰 사회와의 내재적인 계약에 기반한 접근방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소수자의 권리 요구가 지배적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온존시키며,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 또는 절차 속에서 보편주의 원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보장해야 할 ‘차이’를 오히려 억압하며, 자신들의 권리와 정체성을 훼손하고, 보편적 기준에 맞

추고자 하는 정상화 전략이다(장미경 2005, 165-168). 결국 소수자들은 자신들이 주변적이고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들의 일탈적이고 배제된 지위를 다시금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보편주의의 역설에 대한 대응으로서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문화들의 공존상태로서의 ‘다문화적 상황’을 포착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동화전략이 시도되었다. 이에 따르면 각각의 집단은 동등한 인지적 능력과 그 문화의 합리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집단과 문화는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기회 균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공정한 경쟁과 호혜적 공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관용과 비차별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용조차도 주류사회의 질서와 가치에 대한 순응의 과정으로 만약 사회가 어떤 특정한 가치와 문화에 대하여 다른 이들의 것보다 공식적으로 더 우월하고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면 그것 자체가 개인의 가치와 권리에 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집단과 개인의 차이가 관계적이 아닌 범주적으로 인식됨으로써,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 또는 절차가 오히려 ‘차이’의 인정을 억압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개인의 권리 주장에 대한 보편적 보장이 특정 집단의 권리와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역설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차별되어 온 주변집단들의 경우,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틀 또는 동등한 기회보장이란 그 억압과 차별의 상황 자체를 문제삼지 않음으로서 그것을 개선할 여지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둘째, 차이 전략은 차이를 반영하는 전략으로서, 사회는 소수자 집단의 차이를 제거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며 소수자의 경험을 통합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소수자들은 지배문화와 질서 속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주변적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에 자부심을 갖는 행동들을 이끌어낸다.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차이를 강조할 때, 지배적 다수자들은 자신들이 보편이 아니라 특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Young 1990, 156-164). 이러한 차이 전략은 모든 집단이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

여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지향적이고, 배제되고 억압된 집단이 모든 억압과 질곡에서 벗어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해방지향적이다. 이때 차이란 배제와 차별의 근원이 아니라 환원 불가능한 '다양성'으로 인식되고, 모든 정체성들은 재평가하고 고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대상으로 개념화되는 것이다(장미경 2005, 166-168).

### III. 제한 중국 동포 단체의 형성과 발전

#### 1. 한국의 이주자 정책과 중국 조선족의 유입

중국 조선족이 한국에 방문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이다. 이 시기 조선족은 취업이나 정주가 아닌 친지 방문의 명목으로 한국 정부의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일시적인 모국 방문의 형태로 입국하였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점차 중국 조선족 사회에 한국의 경제 수준이 알려졌고,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중국 조선족의 본격적 유입이 시작되었다. 당시 인력난에 시달리던 중소기업체들은 이들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오경석 외 2007, 8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산업연수생제도에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동 3권을 비롯한 사회복지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고용 현장에서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의 만연과 함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산업연수생 제도 자체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설동훈 2001, 56).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995년 노동부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 및관리에관한지침'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도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및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최저임금법 등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되었다. 이후 1998년에는 1997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의 시행령을 근거로 '연수취업제'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 제도 아래에서 이주노동자

는 2년간 산업연수를 거친 후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1년간 연수취업이 허용되었고, 이때 이들의 지위는 노동자로 변경되어 한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이주노동자가 노동자의 신분이 아닌 연수생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연수생들의 작업장 이탈에 따른 불법체류는 점차 증가되었다.

이 시기까지 제한 중국 동포는 한국 내 이주노동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1999년 8월 12일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외동포법)의 제정은 제한 중국 동포의 지위를 크게 변화시켰다. 비록 미국으로 이민한 재미동포와 중국 조선족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는 있었지만 제외동포법의 제정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중국 조선족은 서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 법률의 차별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4년 2월 제외동포법을 개정하고 조선족을 외국 국적 동포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조선족의 한국 진출은 초기 비자 브로커와 불법체류의 성격에서 점차 합법적인 진출과 체류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와 함께 2004년 7월 1일부터는 중국 동포의 고국방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관리제 대상 동포에 대한 방문동거(F-1)사증 발급 지침 및 중국 동포 입국절차'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들로부터 초청을 받은 25세 이상의 중국동포들은 F-1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 또한 한 과거 60세 이상이던 친척방문 허용 연령을 25세까지로 낮추었고, 2004년 11월 11일부터는 동포로 입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대폭 확대하여 적용하는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한 단기종합(C-3)사증 발급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는 등 중국 동포에 대한 입국 요건을 완화하였다. 그 외에 혼인 등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초청할 수 있는 친척의 수를 2인으로 제한하던 실무지침을 폐지하고 요건만 갖추면 2인 이상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2005년에 중국 동포와 구 소련 지역 동포들에 한하여 '자진귀국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2007년 3월부터는 상기 지역

동포들에 대해 5년간 방문과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H-2)’를 신설하여 실시하였다(박광성 2008, 118-119).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중국 동포 이주자는 2014년 5월 현재 567,673명에 달할 만큼 급격한 증가를 보이게 되었다.

<표 2>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별 현황 (2014년 5월 31일 기준/단위: 명)

자격 계	방문취업 (H-2)	제외동포 (F-4)	영주 (F-5)	기타
661,649	268,134	264,534	70,031	58,950
중국 동포 567,673	253,935	186,249	69,275	58,214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2014, 33-34 계구성)

## 2. 제한 중국 동포 단체의 조직과 변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유입된 제한 중국 동포들은 초기 친척방문의 목적으로 들어왔으나 점차 이주노동으로 목적이 변화되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등 불법체류자로 잔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이들의 신분은 타 국가 이주노동자와 별다른 차이를 갖지 못했으며, 사실상 노동에 종사하나 노동자로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인권침해나 제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한 중국 동포는 타 국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여 이주노동자 운동을 펼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결성에 참여하여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노동허가제 도입 등의 문제를 쟁점화시키는 등 이주노동자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운동에 참가한 제한 중국 동포는 국적이나 민족보다는 노동자라는 위계적 신분을 기제로 이주노동자 간 연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제외동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제정된 1999년 ‘제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외동포법)에 따라 제외동포의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연장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1948년 이

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한국 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제한 중국 동포들은 이 법률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당시 이러한 차별적 법률에 대하여 한국의 종교단체와 제한 중국 동포들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 반대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집회를 펼치는 한편, 문현순 씨 등 제한 중국 동포 3명을 청구인으로 “제외동포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한 중국 동포는 정부로부터 제외동포법의 개정을 약속받을 수 있었다(『연합뉴스』 1999/08/22). 비록 이상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제한 중국 동포가 아닌 한국의 교회였지만, 교회는 제한 중국 동포의 동원 기제를 생산해 냈으며, 집회와 타협의 경험을 제공했다. 또한 교회는 그동안 타 국가 이주자와 별다른 차이를 갖지 못했던 제한 중국 동포들을 민족이라는 변수를 통해 결집시켰다(박우 2011, 251-253).

이후 교회는 본격적으로 제한 중국 동포의 권리 구제 활동을 전개했으며, 서울 경기 곳곳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설립했다. 또한 2001년 7월에는 서울조선총교회가 『동북아신문』을 창간하여 제한 중국 동포 권리 구제 활동을 비롯한 이슈를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제한 중국 동포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당시 4,000명 수준이었던 교회 방문 제한 중국 동포는 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듯 2000년대 초반 제한 중국 동포들은 교회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비롯한 집단화에 필요한 결집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요건을 바탕으로 2000년 4월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단결과 우의를 다지며 한중 친선과 조선족 교포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조선족연합회가 설립되었다. 당시 조선족연합회의 활동은 독자적이기보다는 다른 종교 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의 의제를 주장하는 형식을 취했다. 또한 운영 주체에 있어서도 한국의 학자, 법조인들로 구성되어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한 중국 동포 단체라 말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제한 중국 동포들의 집단화는 한국의 교회에 의해 추진되었다. 하지만 2003년 이후 이러한 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2003년 이후 서울조선총교회는 기존의 운동 방식보다 수위를 높여 제한 중국 동포들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중국 국적 포기 운동을 수행하는 한편, 약

2,300여 명의 제한 중국 동포를 동원하여 단식농성을 펼쳤다. 당시 종교 단체는 제한 중국 동포를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들이 고향에서 살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활동들이 오히려 조선족에게는 거부감으로 다가왔다. 당시 조선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중국에서 쌓아온 입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의식이 더해져 오히려 참여가 위축되었다. 더불어 2004년 2월 한국 정부의 제외동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한 중국 동포들이 외국 국적 동포로 분류되었으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제한 중국 동포들이 2005년과 2006년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돌아갈 경우 합법적 신분으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제한 중국 동포의 신분은 점차 안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2007년 3월 제한 중국 동포들은 종전 산업연수생제와 특례고용허가제 보다 완화된 방문취업제를 적용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제한 중국 동포 문제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종교단체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으며, 제한 중국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가 분리되는 상황을 야기했다. 또한 제도를 통한 제한 중국 동포의 합법화는 제한 중국 동포 비종교 단체의 출현 조건을 제공했으며, 기존 제한 중국 동포 단체의 자주성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박우 2011, 257-258).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8년 이후 제한 중국 동포 단체는 양적인 증가와 함께 그 성격과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2000년 결성된 조선족연합회의 활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초기 조선족연합회의 경우 종교단체와 연대하여 제외동포법 개정 운동을 전개했으나, 제외동포법 개정 이후부터는 교회의 간섭에서 벗어나 동포 권익을 위한 독자적인 운동을 펼치는 한편 2006년부터는 쉽터(우리집)를 운영하며 제한 중국 동포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현재 조선족연합회는 가장 오래된 순수 동포 중심단체로 성장했으며, 매달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내는 회원만도 300명이 넘는 정도로 기반을 갖췄다. 회원들은 대부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동포들이고,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의 제한 중국 동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동포세계신문』 2011/07/29).

또한, 2003년에는 한국에 유학중인 석·박사 과정의 중국 조선족 학생들이

로 조직된 ‘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당시 제한 중국 동포의 불법 체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자신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결성되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제한 중국 동포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클로버봉사단을 결성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한 의식 고양에 힘쓰고 있다(『동북아신문』 2010/09/14).

2005년 발족한 ‘귀한동포연합총회’는 조선족 이주자들 스스로가 회칙 및 임원을 선출하고 서울시에 등록까지 마쳤다. 귀한동포연합총회는 현재 구로, 관악, 안산, 수원, 성남, 일산, 영등포 등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산악회와 상인회 등의 지회를 두고 있다. 회원은 약 2,000여 명에 달한다. 회원 대부분은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취득한, 고향의 조선족이 차지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는 한국인의 단체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한국인과 동일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국적회복운동과 같이 적극적인 운동을 실시했지만, 현재는 문화 공연, 조선족을 위한 정책설명회, 자원봉사단을 결성하여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를 실시하고 있다(박우 2011, 258-259).

이후 2008년 11월에 기존의 중국동포상인연합회, 서울 금천구 귀국동포연합회, 동향친목회 등 여러 제한중국동포단체가 모여 ‘제한동포연합총회’를 결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권익단체 이외에도 학술, 문화, 봉사,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한 중국 동포 단체들이 결성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는 ‘중국동포한마음협회’를 들 수 있다. 중국동포한마음협회는 2006년에 축구를 좋아하는 7명의 회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한마음축구단, 한마음산악회, 세종축구단, 베드민턴클럽, 골프클럽, 한마음봉사단, 마미재능나눔회 등 7개의 산하단체에 회원이 4,000여 명에 이르는 제한 중국 동포 단체 중 가장 큰 조직으로 성장했다.<sup>3)</sup>

그 이외에도 한·중 간 교류와 협력을 목표로 한 ‘한중국제연합총회’, 한국에 정착한 조선족들의 창업을 돕는 ‘한중창업경영협회’, 동북 3성의 젊고 유능한 동포사업가들로 구성된 ‘중국동포친목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3) 중국동포한마음협회, <http://cafe.daum.net/yitiaoxin>. (2014년 6월 25일 검색)



활동하는 ‘제한중국동포유권자연맹’, 젊은 세대 중심의 정보 공유 단체인 ‘제한조선족청년연합회’, 동포 교사와 문인들이 조직한 ‘제한동포문인협회’와 ‘제한동포교사협회’, 최근에 발족한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한중국동포여성위원회’, 단체 간 연합인 ‘중국동포연합중앙회’ 등 다양한 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단체로는 ‘GK희망공동체’가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한중 간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이 단체를 조직한 허울진 씨는 국내 최대 중국 관련 온라인커뮤니티 ‘중국조선족대모임’의 운영자이기도 하다. 현재 6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조선족대모임’은 단순회 회원 간 친목 도모를 넘어서 출입국 행정 및 법률 지식 등 제한 중국 동포가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GK 역시 ‘글로벌 한민족’을 뜻하는 약자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형성 및 문화교류를 목표로 한다. 이 단체는 결성 이후 첫 행보로서 지난 4월 일본 원코리아와의 MOU 체결을 통해 동북아 한민족의 교류 협력 및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동포투데이』 2014/04/19).

중국 조선족 단체는 대표적으로 귀한동포연합총회를 들 수 있다. 최길도 씨가 회장으로 있으며, 귀화한 동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지역에 만도 귀화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과 노인정 활동 등이 있다. 이는 귀화자의 대부분이 노년층으로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안이 경로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운영자금 문제로... 또한 귀화자와 미귀화자를 포괄한 단체로서 제한동포연합총회가 있다. 김숙자 씨가 회장으로 있으며 주요 활동은 친목도모와 지역사회 봉사이다. 이 역시 운영자금 문제로 인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는 한마음협회가 있다. 이 협회는 청장년 중심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체육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봉사로는 거리 청소, 김치 담그기, 병행 청소 등이 있다. 체육행사에 있어 현재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중국 조선족 단체는 주로 지역

사회와 어울려 소통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같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외에도 인문, 독서토론회 등 다양한 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중국 조선족 단체는 춘추 전국시대이다.... 향후 하나의 중심적 단체의 결성이 필요하다.

(면답자 A)

이러한 제한 중국 동포 단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제한 중국 동포 단체 현황

이주 정책	결성시기	단체명	단체 성격	주요활동	조직 주체	비고
1990년대 산업연수생	1996	중국노동자협회	노동자 권익	- 법률구조 - 노동상담 - 채류상담	한국인	
2000-2005 재외동포법	2000	조선족연합회	동포 권익, 상호부조	-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 컴퓨터운영	초기 교회 현재 중국 동포	
2005-2007 재외동포법 개정	2006	귀한동포연합총회	정착 지원	- 귀화교육 - 경로당운영 - 컴퓨터운영	귀화 동포	
	2006	중국동포한마음협회	봉사, 체육	- 자율방법 - 지역사회 봉사 - 체육활동	중국 동포	
2007-현재 방문취업제, 재외동포법 개정 요구	2008	제한동포연합총회	동포 권익	- 동포 고충 상담 - 출입국 상담	중국동포	소규모 단체 연합
	2010	중국연맹총회	중국 국민의 권익	- 중국 국민 전체의 고충 상담 및 지원	중국 국민	
	2010	제한동포교사협회	이미지 개선	- 문화의식 선도 - 포럼 개최	중국 동포	
	2012	중국동포유권자연맹	권익신장	- 선거 참여 - 정책개발	중국 동포	
	2012	중국동포친목회	친목	- 사업가 간 친목 모임 - 정보 공유	중국 동포	동북 3성 영비즈니스 리더 모임
	2013	제한조선족청년연합회	회원 간 부조	- 회원 간 정보공유	중국 동포	온라인 카페를 통해 중국, 일본, 미국 동포와도 교류
	2013	한중국제연	권익보호	- 동포 권익 보호	중국 동포	북단장시

	합총회		- 자활 지원 - 한·중 문화교류		정부와 유대 관계 구축, 민간 교류 진행
2014	한중창업경영협회	경제활동 지원	- 동포 창업 지원 - 컨설팅	중국 동포	한·중 경제 교류 사업 추진
2014	GK희망공동체	정보 교류	- 친목, 인적교류 자문, 포럼 개최	중국 동포	일본 동포 단체(원코리아)와 MOU
2014	중국동포연합중앙회	동포 권익	- 한국 체류 어려움 지원	중국 동포	중국 동포 관련 단체 연합
2014	이주와 정착 독서포럼	역량 강화 지역 내 소용 모색	- 독서 포럼 한국사회 이해	중국 동포	

\* 『동북아신문』, 『중국동포타운신문』, 『한중동포신문』, 인터넷 검색(중국 동포 단체) 등을 통해 재구성

이상 표의 단체 결성 시기와 활동에서 나타나듯이 재한 중국 동포 단체는 한국의 이주자 정책과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이주 이후 재외동포법 시행 이전까지 재한 중국 동포 스스로가 조직한 단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비록 1996년에 중국노동자협회가 조직되었으나, 이는 한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한 단체로 엄밀한 의미에서 재한 중국 동포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재한 중국 동포는 스스로를 동포보다는 이주노동자로 인식하고 타 국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여 활동하였다. 이는 재한 중국 동포의 체류 자격이 이주노동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에는 재한 중국 동포에게 동포라는 지위가 주어짐으로써 이들의 활동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당시 결성된 대표적 단체들은 조선족연합회, 귀한동포연합회, 한마음협회 등이 있다. 이 단체들은 설립 목적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은 동포로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재한 중국 동포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은 차별과 자기 위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중국에서 닦아온 자신들의 입지 등이 작용하여 한국인들과 동일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sup>4)</sup> 이러한 인식을 바

탕으로 최근에는 자신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봉사 단체를 결성하는 한편, 스스로가 자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고자 단체를 결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한 중국 동포의 의식에 관한 박광성(2008, 284-287)의 연구에서 제기한 몇 가지 문제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재한 중국 동포는 이주 과정에서 겪은 차별과 차이의 인식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재한 중국 동포 간 내부적 관계 강화를 통한 집단성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비록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고 현실에 만족하더라도 기존의 정체성이 변화되거나 약화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 연구가 주장하듯이 최근에는 중국연맹총회와 같은 단체가 결성되어 한족과 조선족의 구분 없이 중국 국민으로서의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활동을 보이는 한편, GK희망공동체와 같이 글로벌 한민족을 추구하는 단체도 생겨나고 있다.

#### IV.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의 정치’ 양상

##### 1. 정체성의 재구성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된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지위를 통해 다양한 감정과 의식을 형성하면서 ‘나는 누구이다.’라는 자의식을 형성한다. 이러한 감정과 자의식의 총체가 정체성이므로, 이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정을 통해서 부여된다(피터

4) 재한 중국 동포들은 한국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짜퉁’, ‘중국놈(쟁개)’과 같은 비하적 언어와 함께, 이슈가 되는 범죄에서 중국 조선족이 관련 있을 경우 범죄보다는 중국 조선족 전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인터넷 등(오원훈 사건, 계모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야기 한다.  
5) 중국연맹총회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민과 교민, 동포들을 위하여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무료자문과 무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정으로 중국국민의 집이 되고, 대변인이 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버거 1995, 136-137). 또한,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일관되고 고유한 의미 체계를 부여함으로써 확립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관성은 현실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정체성은 현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주체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변화를 경험한다(미야모토 코지 외 2004, 105-106).

한국 내 이주자 또한 이주에 따른 환경변화와 공동체 참여를 통해 당초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재구성되고 새롭게 정립되는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정체성은 이주 이후 모국에 대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자신의 위치 재정립과, 이주민 상호 간의 연대를 통한 거주국에서의 위치 정립, 이주자와 거주국 국민과의 교류를 통한 혼종적 정체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재구성은 재한 중국 동포 집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주자가 이주하기 전에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보다는 종족적, 지역적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주 후 이들은 먼저 입국해서 일하고 있던 모국의 동료를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도움 받는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결집을 이룬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한 중국 동포의 경우는 국가적 정체성보다는 민족적 정체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듯하다. 이는 입국 당시부터 이주노동자와는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도 영향이 있지만 보다 큰 이유는 언어적인 문제일 것이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 한국에서 언어가 통한다. 따라서 한국인과 같이 어울릴 수 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한국인과 같이 상의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단체의 활동에 있어서도 타 국가 이주자들과의 교류보다는 조선족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조선족은 이주노동자와는 생활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류할 일이 적다. 조선족 행사에 있어 한국 내 고려인들을 초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고려인들의 참여가 저조하며 현재는 거의 함께 하지 않는다. 같은 국적의 중국 한족과는 개인적 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체 활동에 있어서는 교류가 거의 없다. 서로가 요구하는 의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면담자 A)

면담에서 특이한 사항은 조선족의 경우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고려인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민족적 정체성이 혈연보다는 언어라는 문화에 기반한 정체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재한 중국 동포는 동일한 언어와 문화, 모국에 대한 애착 등을 통해 이주 전보다 강한 민족적 애착을 보이며, 이를 통해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체성의 재발견이 비단 한민족이라는 종족적 정체성과는 동일시되지 않는다. 귀화 조선족의 경우 국적은 한국이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은 중국계 재외동포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에는 이들 스스로의 한국 생활을 통한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많은 조선족이 취직과 경제활동을 위하여 한국으로 진출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한국의 시선은 외국인 이주자 혹은 기피업종 종사 노동자였다. 이러한 차이의 인식과 차별의 경험 그리고 불법체류 단속 등을 통해 이들은 스스로가 이방인임을 느끼게 된다. 더욱이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지원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까지 더해지고 있다.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단체를 만들려고 해도 다문화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 받기가 어려워요. 일부단체는 다문화라는 용어를 집어넣어 단체명을 변경하기도 하지만 중국 조선족 사이에서는 우리가 왜 다문화냐고 반발이 심해요. 최근에 한 축구 모임도 다문화축구 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사실 140만 이주자 중 3분의 1이 중국동포인데 중국동포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는 없고, 결혼이주자에 대한 투자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증복과 낭비도 심각하구요.

(면답자 B)

이상과 같이 제한 중국 동포들은 국가적, 종족적 정체성의 재정립을 거쳐,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중국 조선족(재외동포)이라는 혼종적 정체성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은 나라밖에 있는 재외동포에는 관심을 갖지만 안에 있는 재외동포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사실 우리 동포들은 다문화 혜택도 거의 못 받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다.

(면답자 F)

이러한 혼종적 정체성은 다른 이주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내 이주자라는 집합적 정체성으로 발전한다.

지난 2011년 세계이주민의 날에 서울시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외국인 어울림 축제를 개최하였다. 3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에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주자들이 각국의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한편, 총 150여 명의 지역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이 참가하여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였다(『한민족신문』 2011/12/17). 또한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국가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이 함께 참가하여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연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3년 전부터 이주노동자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도 이주노동자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면답자 D)

면답자 D는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이주자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한다. 그녀는 이러한 차별에 대하여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있었으며, 나에게는 닥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사회는 여전히 자신들을 외국

사람, 이방인으로 대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한 중국 동포들은 한국의 이주자 정책에 따라 초기에는 재외동포와 이주노동자라는 종족적, 위계적 정체성으로 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거주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단체 활동을 통한 상호 교류와 연대를 통해 집합적 정체성으로서 한국 사회 내 이주자라는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중국 조선족 이주자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국가, 민족, 위계,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층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때의 정체성은 모국에서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정체성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정체성으로서 상황에 의해 구조화되고 획득되어지는 정치화된 정체성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강제적 통합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낳을 것이며, 이러한 저항 과정에서 이주자들은 개인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한편 '이주자'라는 집합적 정체성을 획득한다.

밀리(Miller 2008)는 동화란 소수자 집단들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하고 단순히 주류문화의 한 부분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반면 통합이란 소수자 집단이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고 다른 집단의 성원들과 사회적 접촉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소수자 집단은 집단의 고유성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통합을 위해서는 주류 사회의 민족적 정체성이 재구성되어야 하며, 이때의 민족성은 생물학적 혈연에 기반한 인종적, 종족적 동질성이 아닌, 공공문화를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공통의 공공문화는 정치적 원칙이나 사회적 규범을 포함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생활과 행동양식에 대한 일련의 이해로서, 이를 통해 공통의 정체성과 충성심이 형성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성은 종족적 요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합의에 의해 공공문화는 변화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정체성은 확장 가능해진다고 한다(곽준혁 2010, 114-115).

제한 중국 동포들은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개인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종족 집단의 성원으로서, 거주국의 이주자로서 다중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함께 한국의 주류 문화(민족성)에 대한 변

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적 정체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가가 향후 한국 사회의 이주자 통합과 관련한 과제일 것이다.

## 2. 정체성의 정치 전략

재한 중국 동포의 정체성의 정치 전략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크게 주체화, 동화, 차이라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재한 중국 동포의 정체성의 정치가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는지 재한 중국 동포 단체의 활동을 통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정치적 차원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배제를 없애고 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김범수 2008, 192-193).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인을 통합하는 데 정치적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은 이들을 자율적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사회의 갈등 통합과 연결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의 확립일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의 참정권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참정권은 크게 한국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의 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가의 여부부터 다양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2001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의 주체성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sup>6)</sup>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외국인을 시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헌원재판부 99헌마 494, 2001년 11월 29일] 결정요지 4항에서 “외국인은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인을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선거권을 둘러싼 논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를 거론한 이후 정치권이나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1999년 9월 한국정부는 국내 장기거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였으며, 2000년 11월 의원입법형식으로 20세 이상 장기거주외국인(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최종적으로 2005년 6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었다(이윤환 2008, 34-35).

현행 시행되고 있는 이주자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크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들 수 있다. 이중 체류 자격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주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으며, 국적취득을 하지 않은 이주자는 대선과 총선과 같은 전국적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지방선거에서만 제한적인 선거권을 가진다.

외국국적 이주자의 제한적 선거권 행사는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시작됐다. 당시 6,746명의 외국국적 이주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됐지만, 정작 투표권을 가진 외국국적 이주자는 정치참여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했다<sup>7)</sup>.

그러나, 투표권 허용이라는 제도적 보장은 이주자 사회에 변화를 가져왔다. 2006년 5월 선거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이던 이주자들은 제도의 마련을 계기로 자신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보였다.

일례로 중국계 여성결혼이민자 60여 명이 2006년 12월 17일 가리봉 시장의 서울중국인교회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참여 의식과 욕구를 표현하기 위한 유권자 운동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서 중국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그동안 우리는 온갖 편견과 멸시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거권을 통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정 및 아이

7) 실제로 김혜련(2011)이 중국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결혼이민자 상당수가 영주권이 있음에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들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실천하고자 하는 후보에게 몰아줄 것입니다.”(『재외동포신문』 2006/12/20) 이들은 향후 필리핀,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까지 연대해 유권자 운동을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가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관심 받지 못했던 자신들의 존재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 요구를 펼쳤다.

이후, 외국인 출신 유권자 수의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이들을 대표하기 위한 유권자운동은 점차 규모가 확대되었고, 2010년 5월 27일에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11개를 중심으로 다문화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지원하는 ‘다문화 유권자 연대’가 출범했다. 다문화 유권자 연대는 다문화 유권자 선언을 통해 “다문화 유권자들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문화 유권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0/05/26). 이들은 유권자운동을 통해 다문화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후보, 다문화 사회 정착에 필요한 좋은 정책을 제안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며, 자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2010년 5월 23일에는 중국계 유권자들이 스스로 조직한 ‘귀한동포 연합총회 유권자운동’과 ‘중국계결혼이민여성유권자운동’이 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400여명의 중국계 유권자들은 ‘우리도 유권자’라는 구호와 함께 지역민과 동포들이 함께 어울리는 생활정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가두행진을 진행했다(『동북아신문』 2010/05/23). 이렇게 시작된 유권자 운동은 제한 중국 동포 단체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었으나, 지속적인 활동이 아닌 선거철 목소리 내기 형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최근 2012년에는 개별 단체의 이익을 뛰어넘어 제한 중국 동포 전체의 지위와 권익 향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유권자 조직을 만들고자 10여 개의 제한 중국 동포 단체들의 준비로 ‘제한조선족유권자연맹’이 조직되었다(『월드코리아』 2012/11/13).

질문: 2012년 조직된 ‘제한조선족유권자연맹’이 현재도 활동하고 있나요?

면담자 B: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철에 활동했었다. 현재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요구하는 활동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서울 중국 조선족 유권자는 10만에서 12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의회나 구의회 등에서 의원들이(표를 의식해서) 우리를 방문하곤 한다.

이처럼 제한 중국 동포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활용을 통해 정치 영역에서 적극적인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그 활동에 있어서도 과거 ‘우리도 유권자’라며 동등한 대우를 바라는 동화 전략을 취했음에 반하여, 현재는 정책 개발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의회에 자신들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 사회적 차원

1990년대 제한 중국 동포들은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을 통해 제한 중국 동포들은 자신들이 겪은 부당한 경험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이주노동자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과 더불어 ‘나’에서 ‘우리’라는 집단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한국 국민은 아니지만 노동자로서 사회적 위치를 정립할 수 있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농성을 진행했던 지역의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과 공동으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조직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이들은 이주노동자로서 국가에 의한 권리 보장은 없지만, 저항을 통해 스스로 행동하는 주체로 거듭났다.

하지만, 1999년 재외동포법이 제정된 이후 제한 중국 동포들은 이주노동자 운동과 점차 분리되어 재외동포법의 부당성에 대한 개선으로 관심이 변화되었다. 이 시기 제한 중국 동포들은 스스로를 이주노동자보다 재

외동포로 취급 받길 원했다. 당시 재한 중국 동포의 운동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된다. 하나는 '국적회복운동'을 통해 스스로가 한국인으로서 취급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로서 몇몇하게 한국에서 생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사실 그들 스스로의 의지라기보다는 운동을 주도했던 한국의 종교단체에 의한 것이었다. 재한 중국 동포의 국적회복은 중국 국적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중국에 터전을 일궈온 재한 중국 동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모국인 중국 정부와 중국 조선족 사회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국적회복운동'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반성이 일었다. 더불어 재한 중국 동포의 운동이 이렇듯 양 갈래로 나뉘게 된 것은 스스로 조직한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동북아신문』 2003/12/09). 이후 재한 중국 동포의 운동은 점차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으로 그 중심이 옮겨졌으며, 한국의 종교단체보다 조선족연합회가 힘을 얻어 갔다.

이상과 같이 재한 중국 동포들은 주체화를 통해 점차 스스로를 한국 사회 내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식해가고 있으며, 자신들에 대한 합법적 보장을 비롯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족이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을 돌아보면 조선족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노동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업주들은 조선족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3D 산업을 우리가 활성화 시키고 있다.

(면담자 C)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재한 중국 동포들은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와 공존하고자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이미지 개선과 관련해서 '중국동포한마음협회'의 한마음봉사단,<sup>8)</sup>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의 클로버봉사단<sup>9)</sup>

8) 한마음봉사단은 중국동포사회에서 봉사정신과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조직되

을 비롯하여, '귀한동포연합총회'의 깎김이지원봉사단<sup>10)</sup> 등의 봉사단 활동을 들 수 있다. 또한 재한 중국 동포들은 『동북아신문』, 『한중동포신문』, 『중국동포타운신문』 등의 언론사를 설립해 재한 중국 동포와 한국인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재한 중국 동포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을 위해 '조선족연합회'의 신용호조부,<sup>11)</sup> '한중창업경영협회'의 창업 및 경영 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족연합회의 진복자 총무는 "한국에서 조선족이 인정받으려면 우리 스스로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재한 중국 동포의 정체성의 정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동포세계신문』, 2011/07/29).

이렇듯 재한 중국 동포들은 스스로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자신들의 지위와 이미지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 (3) 문화적 차원

필러(2008, 136-138)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주류 사회의 고유한 정체성의 유지와 강화보다는 주체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획득하고 상호의존적인 공통의식을 형성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통합을 위해 공공문화는 소수자의 요구와 주류 집단의 주장이 서로 논쟁되고 합의되는 과정을 거쳐 내용과 경계는 확장되어야 하며, 더욱 포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있으며, 매달 셋째 주 일요일 정기적 모임을 갖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또한 기타 봉사활동으로 지역 청소, 무료급식도우미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9) 평진구 치매환자센터에서는 한국인을 위한 정기봉사 진행, 컴퓨터 교육 봉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0) 지역 청소와 노인 돌보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1) 조선족연합회는 2008년부터 회원들의 기금을 바탕으로 자체 금융조합을 설립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재한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신용호조부는 1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동포타운신문』 2010/12/22)

이주자의 정체성의 정치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문화적 교류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교류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이는 쌍방향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어느 일방의 문화를 강요하는 것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은 크게 법무부의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 모두 이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주자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부 지자체와 단체를 중심으로 다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서로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자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축제를 계기로 한국 내 이주자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한편, 다양한 국적의 이주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축제는 대부분 한국 단체가 주체였으며, 프로그램의 기획에 있어서도 이주자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재한 중국 동포들은 중국인도 아닌 한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로 인해 이러한 축제의 참여에 있어서도 갈등을 겪고 있었다.

다문화 축제에 참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자들은 전통 공연과 음식을 소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할지 논쟁이 많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은 참가를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로가 함께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인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간의 소통도 필요하다. 그래서 더욱 이러한 행사가 필요하다.

(면담자 E)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조직된 생각나무BB센터의 활동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 단체는 다문화가정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 등에서 오는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결혼이주여성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주요한 활동으로 결혼이주여성 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존감 확립을 위한 이중 언어 교재 발간과 문화 알리기를 실시하고 있다. 3년간의 성과로써 이중 언어 교재 ‘우리는 하나-이웃언어’, 문화알기의 차원에서 5권(몽골편, 중국편, 베트남편, 러시아편, 카자흐스탄편)의 책을 발간했다.

생각나무BB센터는 이주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이주여성들이 직접 투자 해서 만들어진 단체이다. 이 단체를 조직한 안순화(중국 귀화) 씨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머니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엄마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하여 시작했다고 한다. 아울러 외국인 부모 역시 멋진 이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대한뉴스』 2013/09/22). 또한 이주여성들이 이중 언어 선생님으로 활동하면서 이주 여성 가정의 자녀도 엄마와 엄마 나라의 언어에 대해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은 문화가 다른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체는 이주자의 적응과 관련해서 한국어의 습득과 한국문화의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체로서 주류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이주자의 정체성의 정치란 이주자 스스로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인정받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생각나무BB센터의 활동들을 통해 이주자가 한국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 잡고 통합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방적인 문화의 강요보다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쌍방향적인 노력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즉 이주자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 영역을 비롯하여 시민사회 및 경제사회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주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V. 결론

한국은 비교적 단기간에 급증하는 이주자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정책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어촌 사회의 결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이주자 정책은 다문화 정책이라 표방하고 있지만, 수용과 배제라는 이원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주자의 관리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이주자의 정체성의 정치를 접근하였다. 연구 내용은 중국 조선족 이주자가 한국 사회에 유입된 이후 집단을 통해 형성하는 정체성의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이주자의 정체성 정치 양상을 연구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재한 중국 동포의 조직화 이후 나타나는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 중국 동포는 초기 이주 노동자로서의 의식을 바탕으로 조직을 결성하였으나, 재외동포법 시행 이후에는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며 한국인들과 동일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재한 중국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겪은 차별과 자기 인식은 한국인들과 동일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스스로를 한국인과는 다른 재한 중국 동포로 구분하게 하였다. 이로써 재한 중국 동포 단체는 초기 한국 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을 위한 목적에서 점차 자신들의 권익 신장과 역량 강화로 변모하였으며, 최근에는 한·중 교류와 지위 확보를 위한 목적까지 점차 확대 발전하고 있다.

둘째, 재한 중국 동포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체류 자격과 생활권에는 차이가 있으나 국가정체성을 바탕으로 서로 교류하며,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류를 바탕으로 형성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동질감은 한국 내 이주자라는 집합적 정체성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듯 재한 중국 동포들은 국가적, 종족적 정체성에서 시작하여 점차 노동자, 여성이라는 위계적 정체성과 함께 국적을 초월한 이주자라는 집합적 정체성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하나의 정체성을 지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중첩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자신들이 느

끼는 인식에 따라 강조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는 등 다중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재한 중국 동포들은 주체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주체화는 한국의 이주자 정책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노동자, 재외동포, 혹은 한국 내 이주자로 그 방향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주를 통해 재정립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조직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의 의사를 전달하고 요구를 주장함으로써 점차 주체로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한 중국 동포는 스스로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제도와 문화의 수용자적 입장에서 요구자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주체화를 바탕으로 재한 중국 동포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정체성의 정치는 과거 자신들에 대한 수용과 동등한 대우를 주장하는 동화전략의 모습을 보였으나, 점차 자신들의 '차이'를 드러냄과 더불어 '인정'을 요구하며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통합의 조건을 협상하길 원하고 있다.

이렇듯 재한 중국 동포들은 자신들을 위치 지우는 제도와 시선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주체화하고 있으며, 국민 만들기로서의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은 이상과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일방적 동화와 배제가 아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재한 중국 동포 단체의 표면적 성격과 활동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진행함에 따라 그 내부에 존재하는 구성원간의 갈등은 반영하지 못했다. 사실 하나의 단체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구성원들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에 따라 주장하는 의제 또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단체는 분화하기도 하며, 활동의 방향이 변화하기도 한다. 추후 단체 구성원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를 통해 단체의 조직과 변화에 관한 내적 요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동현 (1999). “정체성 정치의 이론적 구성과 전략들.” 『연세학술논집』. 29집, pp. 117-148.

국경없는마을 다문화사회교육원 (2007).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조사연구: 다문화지도제작』. 문화관광부.

곽준혁 편 (2010).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우리시대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 파주: 한길사.

김경진 (2012). “사인여친의 인간관에서 조명해 본 이주노동자의 정체성 정치.” 『동학학보』. 제26호, pp. 179-234.

김범수 (2008). “민주주의에 있어 포용과 배제: ‘다문화사회’에서 테모스의 범위 설정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8권. 제3호, pp. 173-198.

김영옥 (2010). “인정투쟁 공간/장소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아이디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14권, pp. 31-64.

김홍진 (2007).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 『문화과학』. 52권, pp. 193-206.

미야모토 코지 외 (2004). 『삐딱이로의 초대』. 양인실 역. 서울: 모멘토.

박광성 (2008).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이동과 사회변화』. 파주: 한국 학술정보.

박우 (2011). “한국 체류 조선족 단체의 변화와 인정투쟁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제91호, pp. 241-268.

석현호 외 (2003). 『외국인노동자의 일터와 삶』. 서울: 지식마당.

설동훈 (2001).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와 대책.” 『인권과 평화』. 제2권. 1호, pp. 53-87.

악셀 호네프트 (2011).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역. 서울: 사월의책.

여성가족부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연구보고, 서울: 한학문화.

오경석 외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파주: 도서출판 한울.

이윤환 (2008).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선거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2권, pp. 23-45.

임도경 (2010). “외국인 이주민이 본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 연구.” 『주관성연구』. 제20호, pp. 101-120.

장미경 (2005).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제39집. 6호, pp. 159-182.

김리카 (2008).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장동진 외 역. 파주: 동명사.

피터 버거 (1995). 『사회학의 초대-인간주의적 전망』. 이상률 역. 서울: 문예출판사.

Brubaker, Rogers (2004). *Ethnic without Group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Dean, Jodi (1996). *Solidarity of Strangers: Feminism After Identity Politic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iller, David (2008). “Republicanism, National identity, and Europe.” *Republicanism and Political Theory*: Blackwell, pp. 133-158.

Soysal, Yasemin Nuhoglu (1994).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aylor, Charles (1994). “The Politics of Recognition.” *Multicultur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25-74.

Young, Iris Marion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구정모. “다문화 유권자 연대 27일 공식 출범.” 『연합뉴스』. 2010년 5월 26일.

김용필. “재한조선족연합회 2010년 한해를 보내며.” 『동포타운신문』. 2010년 12월 22일.

김춘광. “세계이주민의 날 맞아 외국인 어울림축제 개최.” 『한민족신문』. 2011년 12월 17일.

맹찬형. “재외동포법, 평등권 침해.” 『연합뉴스』. 1999년 8월 22일.

박해준. “다문화가정의 한국 알림이 생각나무BB센터.” 『대한뉴스』. 2013년 9월 22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4년 5월호.

왕길환. “평등한 재외동포법 개정 촉구 연대 집회.” 『연합뉴스』. 2002년 6월 14일.

이동렬. “국내체류 65만 중국인(계)대표 유권자운동출범.” 『동북아신문』. 2010년 5월 23일.

정재수.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우리도 유권자-운동본부 출범식 갖고 이주여성 권익보호 후보지지 밝혀.” 『재외동포신문』. 2006년 12월 20일.

“동포법을 개정하고 불법체류 사면하라.” 『동북아신문』. 2003년 12월 9일.

“2013 중국동포사회 10대 뉴스 ①중국동포 고려인동포 체류권 보장 시위 및 대축제.” 『동북아신문』. 2013년 12월 11일.

“조선족 유학생들, 주류사회 진출 노력 박차.” 『동북아신문』. 2010년 9월 14일.

“재외동포법 개정운동, 그 정신 되찾자.” 『동포세계신문』. 2011년 7월 29일.

“원코리아, GK희망공동체와 상호협력 MOU.” 『동포투데이』. 2014년 4월 19일.

“재한중국동포유권자연맹 출범.” 『월드코리아』. 2012년 11월 13일.

귀한동포연합총회. <http://cafe.daum.net/tonglian>. (2014년 4월 21일 검색)  
생각나무BB센터. <http://bbcenter.co.kr>. (2014년 3월 22일 검색)  
이주민네트워크. <http://cafe.daum.net/koreanmom>. (2014년 7월 8일 검색)  
제한동포연합총회. <http://cafe.daum.net/zaihantongbaolianhe>. (2014년 4월 28일 검색)  
제한조선족청년연합회. <http://cafe.daum.net/jocheongyeon>. (2014년 6월 20일 검색)  
중국동포한마을협회. <http://cafe.daum.net/yitiaoxin>. (2014년 6월 25일 검색)  
한중창업경영협회. <http://cafe.daum.net/ckfa>. (2014년 6월 28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4년 08월 29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09월 25일 |  
| 게재확정일 : 2014년 09월 26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3 (2014)

## A Study of Identity Politics of Korean-Chinese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organisations and their activities

Chun-Ho Lee  
(BK21+ Global Diaspora, Chonnam Univ.)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the identity policy of Korean-Chinese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ir mutual co-existence in Korean society.

This research will investigate the way of changes of adaptation by the activities of collective movement of Korean-Chinese centrally in Korea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hows how experiences enhance the self awareness and change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culture in demand by members of Chinese Korean society as consumer and also, shows the pattern of organizing the changes of identity on the basis of various fields of migration. Korean Chinese is required to achieve the recognition of member in the Korean society by reducing the confidence gap gradually. In consideration of these changes, Korea, in future, should establish social integration policy through interactive communication rather than one-sided assimilation.

• Key words: Korean-Chinese in South Korea, Immigrants organizations, identity, Subjectivation, Identity Politics